

## 법과 정치

### 1. 정치의 의미

정답 ③

A는 집단 현상설, B는 국가 현상설이다. ③ 국가 현상설보다 집단 현상설에서 정치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⑤ 집단 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이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②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제한 활동으로 보는데,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④ 집단 현상설이 국가 현상설보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 설명에 유리하다.

### 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답 ⑤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상징적 존재인 국왕이나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수상 또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① 의원 내각제가 책임 정치의 구현에 유리하다. ②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가 정책의 계속성 확보에 유리하다. ③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적이지만,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 권력 구조이다. ④ 여소야대 현상은 대통령제에서 나타난다.

### 3. 형사 재판

정답 ⑤

⑤ 벌금 500만 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죄 선고가 아니므로 A씨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지법 제1형사부가 A씨에 대한 2심 재판을 관할 하였으므로,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 단독부가 관할하였다. ② 징역형은 자유형 중에서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이다. ③ 2심 법원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없던 사황을 범죄 증거로 인정한 1심 법원의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를 하였다. ④ 형사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되므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A씨와 검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4. 범죄의 성립 요건

정답 ①

① 형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긴급 피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L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5. 사회 계약 사상

정답 ④

성약설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 사람은 홉스이므로, A와 C는 각각 로크와 루소 중 하나이다. ④ 2권 분립을 강조한 사람은 로크이다. A는 로크가 될 수 있으므로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① A가 로크라고 특정할 수 없다. ②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한 사람은 로크이다. ③ C가 루소라고 특정할 수 없다. ⑤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 6. 헌법 재판 제도

정답 ③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할 수 있다. ① 소송의 제기는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② 근로기준법은 사회법의 일종으로서,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④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때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 7. 미성년자의 근로 보호

정답 ①

ㄱ.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가진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임금은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

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연소 근로자(15세~17세)의 경우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인 자도 마찬가지이다. ㄹ.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와 합의 시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 8.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정답 ④

사례에서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 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며, 야생 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이다.

### 9. 탄핵 제도

정답 ⑤

밀줄 친 '제도적 장치'는 탄핵 제도이다. ㄱ.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관이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한다. ㄷ.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국회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ㄴ. 탄핵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 결정과 민·형사 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0. 가족 관계와 법

정답 ④

④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①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한 쪽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된다. ②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A와 B는 같은 액수의 상속을 받게 된다. ③ 배우자인 을과 직계 비속인 A는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 11. 선거 결과의 분석

정답 ①

① 지역구 의석 1석을 얻기 위한 평균 득표수는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비가 클수록 적어진다. A당이 1.3으로 가장 크다. ② B당의 총 의석 점유율은 36.5% (73/200)이고, 비례대표 의석 점유율은 40%이다. ③ C당과 D당 모두 지역구 의석 점유율보다 득표율이 2배이지만, 이것이 당선에 기여한 표보다 사표가 2배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없으므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⑤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없으므로, 대통령제 국가라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 정부 정책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12. 선거 제도

정답 ②

표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같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알 수 있다. ㄱ.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하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ㄷ. 다수 대표제에서는 1위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ㄴ.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인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ㄹ.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수 대표제와 결합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 13. 양당제와 다당제

정답 ③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③ 다당제가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①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소수의 이익 보호에 유리하다. ④ 양당제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 ⑤ 군소 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은 다당제이다.

### 14. 정당별 공천 방식

정답 ⑤

ㄱ. 당원 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공천을 결정하

는 방식이 당내 민주주의 구현에 충실하다. ㄷ. C당의 공천 방식은 후보자가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ㄹ.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가장 큰 공천 방식은 C당의 공천 방식이다. ㄴ. A당의 공천 방식은 하향식이며, 후보자 결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 15. 민법 원칙의 변화

정답 ③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무효로 하는 근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ㄷ.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ㄱ. 개발 제한 구역 제도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계약 공정의 원칙은 자유로운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가진다.

### 16. 주요 헌법 기관의 기능과 권한

정답 ③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 C는 국회, D는 대법원이다. ③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②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⑤ 대법원은 대통령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17. 사용자 배상 책임

정답 ③

을. 손해배상 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병. 사용자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갑. 사용자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B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 A씨가 B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B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C씨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 18.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

정답 ②

제시문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국가들의 대립과 갈등의 장이며,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의 유지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 19. 국제법의 법원

정답 ④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④ 국제 관습법은 체결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①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②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③ 내정 불간섭 원칙,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⑤ 국제 관습법, 조약,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활용된다.

### 20.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정답 ⑤

ㄷ. 이사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ㄹ.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ㄱ. 소유권 변동 사항은 등기부 등본 갑구, 저당권 설정 여부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렵다.